



주민투표 실시제도 문턱 대폭 낮춘다

이상봉 위원장, 청구 기준 하향 조례 개정 추진 청구 연서 주민수 4만6483명 → 1만1155명으로 1000명 모이면 일반 주민도 조례 제·개정 가능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제도 문턱이 낮아질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 을)은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

례 제·개정 청구에 관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도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연서 주민 수는

4만6483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해 연서 주민 수를 1만1155명으로 낮추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연서 주민 수 2782명) 이 기준을 550분의 1로 개정해 연서 주민 수를 1012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

법의 시행일은 내년 1월 이후이며, 제주특별법 개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간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시킴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월 초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강 대사와 내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사 부임으로 한일 관계 큰 발전 기대”

문 대통령 주일대사 신임장 강창일 대사 “역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게 “정치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강 대사 부임을 계기로 (한일) 양국 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강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한 뒤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는 강 대사와 내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강 대사에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 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며 “신임대사로써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부미원기자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최종 확정

원심 판결대로... 추징금 35억 문 대통령 사면 고민 깊어질 듯

국정농단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국정농단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

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에는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이후 2017년 4월 구속기소됐다. 이미 세

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형을 모두 채울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는데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이날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별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

야 하는 요건이 있다. 수감 중인 이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시작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에 대해 고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부미원기자

도의회,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팔 걷어

농수축위-농협-웅진식품 협약 경제 활성화·소비촉진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가 제주산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확대에 팔을 걷어 붙였다.

현재 코로나19 및 경제 침체 등 소비시장이 위축돼 있고, 수입 농수축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지역 소재 기업 및 단체 등 구매력 있는 대규모 소비처를 발굴해 생산자 단체와 연결·구매토록 하고, 지속적인 소비로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농수축경제위는 1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주식회사 웅진식품과 제주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웅진식품은 사원 격려품 및 군부대 위문 물품으로 제주 감귤 1200박스를 주문했고 향후에도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구매와 원물을 활용한 가공분야에서 농협과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농수축위는 또 도내 먹거리 취약 계층에 대한 수요 파악과 이를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주산 식자재를 공급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현길호 위원장은 “최근 한과·폭설 피해로 인해 농업인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4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농협-웅진식품과 함께 제주산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한 고심이 많았고 농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뿐만 아니라 소비부진을 겪고 있는 제주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면서 “앞으로 구매력 있는 대규모 소비처 발굴에

대한 지원과 먹거리 복지 추진 및 제주산 식자재의 선순환 체계 구축, 생산자단체와 식품가공전문기업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공공성 훼손 지상과 중간광고 철회하라”

한국신문협회 14일 성명서

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전면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는 14일 성명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하고 시청자인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어 “지상파 방송은 존립 근거인 공공성과 공익성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상업적·자극적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분리편성 광고라 불리는 편성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해왔다”고 질타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를 인상하거나 중간광고를 허용해줄 게 아니라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며 “지상파 방송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가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방침을 철회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무료 내선공사실무및전기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취득과정

접수기간: 2021년 01월 05일 ~ 2021년 01월 31일 (정원22명 초과시 조기마감할수 있음)

교육기간: 2021년 02월 01일 ~ 2021년 07년 30일 (6개월, 125일, 870시간)

교육시간: 09:00 ~ 17:00 (7교시, 점심시간 12:00 ~ 13:00)

교육내용: 전열, 조명, 동력설비, 배선, 배관, 태양광설비, 전기기사 필기·실기, 신재생에너지기사 필기·실기

필요서류: 내일배움카드

합격 (총 23명 응시)

“2020 4회 전기기사” 87% 최종합격 양*호, 나*철, 고*빈, 변*규, 이*진, 김*호, 송*원, 김*철, 박*욱, 김*수, 김*진, 김*철, 문*기, 문*국, 정*우, 김*철, 문*인, 임*봉, 현*림, 김*희

(주)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 옥 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출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의 **064.742.6234**
010.7599.6234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강력한 신맛억제 효과!!!

산도 DOWN 당도 UP

신맛제거제

판매처: 명농원
대표 김달식 010-3697-5624
진영기업(주) 제주지점